

제3차 G20 정상회의 결과와 시사점

윤 덕 룡 국제거시금융실 국제거시팀 선임연구위원 (dryoon@kiep.go.kr, Tel: 3460-1068)

오 승 환 국제거시금융실 국제거시팀 연구원 (ohsh@kiep.go.kr, Tel: 3460-1228)

1. 제3차 G20 정상회의 개요
2. 주요 의제 및 타결내용
3. 정상회의의 정례화 및 한국 개최의 의미
4. 시사점 및 향후 과제

주요 내용

- ▶ 미국 피츠버그에서 9월 24~25일 개최된 제3차 G20 정상회의에서는 기존의 합의 이행을 점검하고 현안으로 제시되었던 금융분야 감독의 강화와 국제금융기구 개혁에 대한 구체적 합의, 균형성장을 위한 국제공조체제의 도입에 합의하는 성과를 보임.
- ▶ 피츠버그 정상회의 결과로서 각국 정상들은 국제거시정책 공조, 국제금융구조 및 금융기구 개혁,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체계, 에너지안보 및 기후변화, 최빈국 지원 등에 관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함.
- ▶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G20 정상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그동안 임시협의체적·한시적이던 기구의 성격을 탈피하고 G8을 대체하여 국제경제 및 금융분야의 실질적 국제거버넌스 조직으로 위상을 강화함.
- G20 정상회의는 균형성장을 위한 거시경제적 공조체제를 도입하여 위기 후의 국제공조를 위한 합의에 도달하였고, G20의 정례화 합의로 국제사회에서 사실상의 경제관련 최고협력체로 그 위상을 강화함.
- ▶ 한국은 제5차 G20 정상회의의 개최국(2010. 11)으로 결정됨에 따라 G7 비회원국으로서는 최초로 의장국의 역할을 수임하게 됨.
- 한국은 G20의 정례화로 국제사회에서 규칙제정자의 위치로 도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G20 정상회의의 개최국 선정으로 G20 회의를 이끌어가는 국가로서의 입지를 확보함.
- ▶ G20은 2차세계대전 이후 가장 심각한 글로벌 금융 및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성공적으로 기여한 공로로 국제사회의 새로운 거버넌스 조직으로 등장하였으나 갈등해결능력과 합의의 실행능력이 향후 영향력을 결정할 것임.
- G20의 효율화를 위해 이를 지원하는 하부구조 도입이 필요하며 실무그룹(WG)의 운영, 사무국 설치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 한국은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내부적 조직 정비와 업무분장, 협력체계의 도입 등이 필요하며 국제적으로 여타 의장국들과 협력하는 한편, 국내적으로 정부, 학계, 전문가 등을 조직적으로 연계하는 협력망 구축이 필요함.
- 한국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G20 내에서의 공조체제 기반 확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역내협력 특히, 한중일간 협력체제의 도입이 요구됨.

1. 제3차 G20 정상회의 개요

■ 9월 24~25일 제3차 G20 정상회의가 미국 피츠버그에서 개최되었음.

- 이번 회의는 지난 1차와 2차 회의에서 논의하고 합의한 사안과 경제위기 극복사항들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평가하고 재확인하였으며 출구전략 등 주요 국제문제에 대해서 논의하는 성격의 회의였음.
- 3차 정상회의에는 G20 국가 이외에 네덜란드, 스페인, 스웨덴, 에티오피아, 태국과 국제기구인 IMF, 국제노동기구(ILO), UN, 세계은행, OECD, 국제무역기구(WTO),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 32개 국가(기관)가 참석하였음.

표1. G20 국가

분류	국가
G7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이탈리아
아시아	한국,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중남미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유럽 등	러시아, 터키, 호주, EU 의장국
아프리카	남아프리카공화국

■ 2008년 11월 G8 의장국이었던 프랑스의 제안으로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공조체제 마련을 위해 한시적 모임으로 출범한 G20 정상회의는 참여국의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세계 전체의 85%를 차지하고 있는 최대규모의 국제회의로 1차 회의는 2008년 11월 워싱턴, 2차 회의는 2009년 4월 런던에서 개최되었음.

표2. 1차 및 2차 회의 주요 의제

장소 및 일시	의제 및 성과
미국(워싱턴) 2008.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개항 및 Action Plan(47개 실천과제)으로 구성된 정상선언문 채택 • 국제금융위기 원인과 그간의 조치에 대한 평가 • 금융위기 해소를 위한 정책공조방안 • 국제금융체제 개편방향 • 자유무역, 시장경제 기본원칙 재확인
영국(런던) 2009.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9개항의 정상선언문 및 2개 부속서 채택 • 확장적 재정통화정책 등 거시경제정책 공조방안 • 보호주의 저지 • 금융규제 및 국제협력 강화 • 국제금융기구 개혁

■ 3차 G20 정상회의의 주요 안건은 출구전략 및 거시경제정책 공조, 국제금융제도 및 기구 개혁, 세계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등이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3. 3차 회의 주요 안건 및 내용

주요안건	주요 내용
출구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경제는 회복되고 있으나 아직 위험요인이 상존함 - 지속적인 경기부양정책이 필요하며, 출구전략은 경제 회복 확인후 시행
지속가능한 성장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한 국제공조를 위한 협력체제 합의 - IMF가 상호평가를 위한 정책감시를 강화하고 G20 및 IMFC 회의에 보고함 - 11월 재무장관회의에서 구체적인 계획 마련
금융규제 개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년까지 국제적으로 합의된 은행 자본규제 기준을 마련하고 2012년까지 이행 - 상여금 지급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 - 다국적 금융기관 정리방안 및 감독강화 방안을 2010년까지 마련
국제금융 기구 개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MF 쿼터를 과다보유국에서 과소보유국으로 최소 5% 이전 - 세계은행의 투표권 개혁은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 최소한 3% 이상 이전 추진
에너지, 기후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 에너지 시장의 투명성 제고 합의 - 청정 및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에 대한 투자 장려
개발, 고용, 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량안보, 빈곤층에 대한 금융접근성 제고 방안 추진 - 2010년 초에 미국 주도로 노동관계 장관회의 개최 - 2010년까지 DDA 협상 타결 추진
향후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20를 세계 경제협력을 위한 최상위의 포럼(premier forum)으로 지정 - 2011년부터는 연회 정례적으로 개최 - 2010년 6월 캐나다, 2010년 11월 한국, 2011년 프랑스 개최

2. 주요 의제 및 타결내용

■ 3차 G20 정상회의에서는 국제금융기구 개혁, 세계경제의 균형있는 지속가능한 성장, 출구전략 등을 비롯한 거시경제정책 공조에 대해서 논의함.

- 각국의 정상들은 워싱턴·런던 정상회의 합의사항을 점검하고, 합의사항의 신속하고 완전한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을 확인하였음.

■ 피츠버그 정상회의의 결과로서 각국 정상들은 지속가능 성장체제, 국제 금융규제체계 강화, 국제기구 개혁, 향후 일정 등으로 구성된 선언문에 합의하였음.

- 선언문은 31개항의 서문, 8개 주제에 50개항의 본문, 2개

부속서로 이루어져 있으며, 참가국의 관심사를 균형있게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가. 국제 거시정책 공조 및 출구전략

■ 각국의 정상들은 아직까지 세계경제의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으며, 세계경제 회복이 확고해질 때까지 경기부양을 위한 정책대응을 유지할 것으로 합의하였음.

- 각국 정상들은 물가 안정 및 장기 재정건전성을 고려하면서, 확장적 재정·통화정책 기조와 필요한 수준의 금융지원책을 지속하여야 함을 강조하였음.

■ 비록 출구전략이 아직 시기상조이지만 각국 정상들은 향후 정책의 공조 및 사전조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였으며, 구체적인 논의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의견을 수렴하였음.

- 다만, 국가별 특성에 따라 세부적인 출구전략 시행시기 및 규모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논의되었음.

- 따라서 11월 스코틀랜드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출구전략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나. 금융규제 개선 및 국제기구 개혁

■ 금융규제 개혁과 관련해서는 은행 자본규제 강화, 보상체계,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기관에 대한 감독강화 등과 관련하여 규제체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합의하였음.

■ 은행에 대한 자본규제 및 자본확충 강화와 관련해서는 2010년까지 기준을 마련한 후 2012년 이행하는 것으로 목표를 제시하였음.

- 은행 자본의 질과 양을 향상시키고, 과도한 레버리지를 억제하며 은행의 과도한 리스크부담 행위에 대한 인센티브를 축소하고 충격에 보다 잘 견딜 수 있는 금융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할 것임.

- 또한 국제금융시장에서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레버리지 비율의 세부사항은 국제적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며, 회계상의 차이를 완전히 조절할 것을 명시하였음.

■ 금융회사의 보수체계와 관련하여 상여금 지급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금융안정위원회(FSB)의 권고안¹⁾을 이행하기로 합의하였음.

■ 장외파생상품시장 개혁과 관련하여서는 2012년까지 모든 표준화된 장외파생상품을 중앙청산소를 통해 청산기로 하였으며, 다국적 금융기관의 정리방안과 시스템상 중요한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방안도 내년까지 마련하기로 합의하였음.

■ IMF 쿼터개혁의 경우 2011년 1월까지 과다보유국에서 과소보유국인 신흥개도국으로 5%이상 쿼터를 이전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IMF내에서 최빈국의 투표권 비중을 보호하기로 합의하였음.

- 따라서 정상들은 쿼터 증액규모, 이사회 구성 및 규모, 이사회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IMF의 전략적 감시에 있어서의 거버너 참여 등에 관해서 향후 이슈로 다룰 것임을 확인하였음.

■ 세계은행 및 다자간개발은행의 개혁에 관해서는 최빈국 개발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식량안보, 인적자원 개발, 민간주도 성장지원, 녹색성장 전략 지원 등의 기능을 확대하기로 함.

- 세계은행의 투표권 개혁안도 1단계 개혁에서 1.46% 증가한 것에 추가해 과소대표된 신흥·개도국으로 최소한 3% 이상 투표권의 쿼터를 이전하는 방안을 2010년 봄 회의 시까지 추진기로 하였음.

다. 지속가능한 균형성장

■ 각국의 거시경제정책이 지속가능하고 균형된 성장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협력체계(framework)'를 구성하는 데 합의하였음.

■ 현 세계경제에서 흑자국과 적자국이 고정적으로 존재하는 상

1) (i) 다년간 보장된 상여금 회피, (ii) 장기 가치 창출과 리스크 보유기간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창출하도록 변동보상(variable compensation)의 상당 부분을 지급연기하고, 성과에 상응토록 하며, 적정히 환수되도록 하는 한편, 적절한 기간동안 보유되어야 하는 주식 또는 유사한 상품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 (iii) 고위임원과 리스크를 창출하는 직원들의 보상은 성과 및 리스크와 합치, (iv) 금융기관의 보상정책과 보상구조의 공시, (v) 건전한 자본기준 유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변동보상을 총순수입(total net revenue)의 일정비율로 제한, (vi) 보상위원회가 보상정책을 독립적으로 감독(overseeing).

황에서는 세계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인 중장기 거시경제 공조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3단계로 추진될 예정이다.

- 첫째, G20에서 세계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거시경제 공조 목표를 결정함.
- 둘째, 각 개별국들은 자국이 공조목표의 달성여부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제시함.
- 셋째, IMF가 각 회원국들의 공조노력에 대한 보고서를 평가하여 충실히 수행하지 못한 국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국가를 거명(naming)하여 창피를 주는(shaming) 방식으로 눈치주기 압력(peer pressure)을 주게 될 것임.
- G20 각국의 재무장관들은 11월까지 각국의 내수 및 수출 정책을 서로 평가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검토할 예정이다.
- 그리고 평가를 위한 실무작업은 국제통화기금(IMF)이 맡아 주기적으로 세계경제발전, 수요증가 패턴 및 정책조정방안을 보고하기로 하였음.

라.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석유시장 투명성 증대, 석유선물시장의 규제감독 향상, 화석연료 보조금 철폐 등을 이행하기로 논의하였음.
- 또한 각국 정상들은 기후변화 재원 조성과 관련, 녹색성장, 기후변화 재원 마련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개발정책과의 연계, 개도국 지원을 위한 공공민간 재원 증대 필요성, 탄소시장 활성화 등의 중요성을 확인하였음.

마. 최빈국 지원, 고용, 무역

- 세계의 빈곤인구가 식량, 연료 및 금융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새로운 조치를 실시할 것임을 확인하였음.
- 양질의 고용 확대를 위해 각국은 국내정책을 통해 변화하는 시장수요에 적응하고 신기술·청정에너지·환경·건강·인프라를 혁신해야 하며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노동자들의 능력을 강화해야 함.

■ 무역금융 2,500억 달러 조성 달성을 평가하고, 무역투자의 신규장벽 동결(stand-still) 공약을 재확인하며, 국내정책의 무역투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금융보호주의로 후퇴하지 않을 것을 합의하였음.

■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의 2010년 타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논의하였으며, 2010년 초 통상장관들은 협상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다음 정상회의에서 검토하기로 약속하였음.

3. 정상회의의 정례화 및 한국 개최의 의미

가. 정상회의의 정례화

■ 이번 피츠버그 회의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태스크포스 형태로 출범한 G20 정상회의를 매년 개최하는 정례회의로 전환할 것임을 발표함.

■ G20은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신흥국의 경제적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G8 국가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제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IMF회원국 중 20개국을 선정하여 구성한 재무장관회의로 발족되었음.

- 1999년 12월 베를린에서 첫 G20 재무장관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가 참석하는 모임으로 시작됨.

- G20 재무장관회의는 지난 10여 년간 각료급회담으로 상호 합의한 범위의 문제들만 협의하는 국제회의였음.

■ 그동안 국제사회는 사실상 G8이 국제관계를 관리하고 주도해왔으며 국제경제와 외교 및 안보 등 주요 국제이슈 전반을 다루어 왔으나, 신흥국의 영향력 확대와 G8의 영향력 감소에 따라 새로운 국제거버넌스 구조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옴.

- 국제사회에서 신흥국의 정치적, 경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국제적 이슈의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G8 회의의 확대개편 혹은 새로운 국제거버넌스 구조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최소한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국가들을 포함하는 형태로 G13, G14, G20 등의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됨.

■ 결국, 이번 피츠버그 회의에서 G20 회의를 정상간의 연 1회

정례회의로 개최할 것을 결정함에 따라 국제사회의 가장 중심이 되는 일급 국제회의(premiere forum)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됨.

- 이번 미국발 글로벌 경제위기가 당초 예상에 비해 빠른 속도로 극복되고 있는 것은 G20을 중심으로 한 국제공조가 성공적으로 기여한 탓으로 판단됨. 이에 따라 향후 국제경제 관련 주요 이슈에서도 G20가 중요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따라서 향후 글로벌 거버넌스에서 적어도 경제·금융 이슈는 G20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정치·안보 이슈는 상당 기간 G8이 주도하는 형태로 역할 분담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 G20 정상회의 정례화로 인해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규칙준수자의 입장에서 규칙제정자의 위치로 국가적 위상이 옮겨가게 되었음.
- 지금까지 한국은 세계질서를 관리하거나 글로벌 규칙을 제정해본 적이 없으며 다른 나라들이 국제기준을 만들어 제공하면 단지 수용하고 지키는 일이 전부였음.
- 그러나 이제는 전 세계경제를 규율하는 관리자로서 규칙을 제정, 변경, 폐지하는 지배그룹의 일원이 됨에 따라 그동안 갖지 못하였던 큰 국제적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음.
- 구체적으로 한국이 G20 정상회의의 회원국으로 규칙제정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첫째, 국제사회의 변화동향을 먼저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으며, 이는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규칙을 필요로 하거나 규칙의 변화가 필요할 때 먼저 G20 내부에서 실무적 논의를 거치게 될 것이기 때문임.
- 둘째, 한국의 이해관계를 국제사회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임. 한국이 독자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못할지라도 한국의 이해관계를 규칙제정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짐.
- 셋째, 국제적 영향력 확대로 한국의 정치적 지지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가가 늘어날 것이며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우

호적인 국가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나. 정상회의의 한국 개최의 의미

- 2010년 6월 제4차 정상회의를 캐나다에서, 11월 제5차 정상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발표하였음.
- 캐나다의 경우는 G8 의장국으로서 당초 G8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다가 규모를 확대해 G20 정상회의를 함께 개최하기로 결정함.
- 따라서 G20 정상회의의 정례화 이후 실질적인 첫 번째 정상회의 개최지는 한국으로 평가할 수 있음.
- 한국은 내년 G20회의 의장국으로 주최국까지 겸하게 됨으로써 2010년 국제사회에서 중심적 위치에 서게 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G20 정상회의가 G8 국가가 아닌 신흥국에서 처음 개최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 * 1차(미국, 워싱턴) - 2차(영국, 런던) - 3차(미국, 피츠버그) - 4차(캐나다 예정) - 5차(한국 예정) - 6차(프랑스 예정)
- 한국이 G20 정상회의의 개최지로 결정된 것은 국제사회가 한국의 국제적 리더십을 인정한 것으로, 한국의 경제정책 운용에 대한 신뢰만이 아니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협력에 대한 한국의 기여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와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여 경제정책적 수행능력에 대한 국제적인 모범사례로 인정됨.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공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에서 보호주의 확대중지(stand-still)를 제안하였고 2차 회의에서는 재정정책 공조를 합작하는 등 주요 정책공조를 주도함.
- 국제사회에서 합의도출을 위해 활발한 사전협의와 조정에 많은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성숙한 외교적 역량을 인정받아 G8 국가가 아님에도 정상회의의 개최국으로 결정됨.
- G20 정상회의의 의장국은 회의를 개최하고 진행할 뿐 아니라

회의에서 논의할 이슈 결정 및 논의과정의 선택에 주도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회의에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

- G20 정상회의에서 다양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한국이 개최국의 역할을 수임하게 된 것은, 한국이 국제사회의 신임을 획득하였음을 시사함.

4. 시사점 및 향후 과제

■ G20가 G8을 대체하여 경제 및 금융이슈에 대해서 국제거버넌스의 중심조직으로 등장하고, 국제사회의 지배구조가 서방 선진국 중심에서 신흥경제권으로 확대되었으며, 특히 아시아로 무게중심이 크게 이동함.

- 이러한 변화추세는 거대 신흥국들의 급속한 성장속도를 감안할 때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경제력이 외교 및 군사력을 지탱하는 기반이 되는 것을 감안하면 외교 및 안보분야 관련 이슈들에 대해서도 점차 G20의 영향력이 확대될 것임.

■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위기극복만이 아니라 위기 후 세계경제 위험요인에 대응하여 추세성장 회복, 세계경제의 균형회복(rebalancing)을 위한 국제협력 문제 등 위기 이후의 관리체제(post-crisis management)로 논의 범위가 확대되었다는데 의의가 있음.

- 이는 이미 G20가 위기 후의 경제질서관리에 대한 책임을 담당하고 나선 것을 시사함.

■ G20 정상회의는 초기에 갈등해결 능력과 정책의 실행능력을 시험하는 도전을 맞게 될 것이며, 이 도전들을 성공적으로 극복해야 명실공히 새로운 국제거버넌스 조직(international governance structure)으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임.

- G8의 축적된 경험과 외교적 역량에 비하여 새로 G20에 진입한 신흥국들이 상대적으로 갈등관리의 경험이 적은 점과 참가국의 증가, 다양한 집단적 특성으로 인해 갈등관리가 주요 과제가 될 것임.

- 회원국들이 지금까지는 글로벌 경제위기라는 시급한 문제로 인해 개별적 이해관계 표출을 억제하고 동일한 목소리를 낼 수 있었으나 세계경제가 정상화되는 경우 합의를 찾아내기

가 어려울 수 있음.

- G20의 합의를 실행하게 만드는 유일한 압박수단인 눈치주기(peer pressure)만으로는 실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서 G20의 정책실행능력이 향후 G20의 영향력을 결정하게 될 것임.

■ G20 정상회의가 국제적 거버넌스 시스템으로 정착되기 위한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G20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다수의 국가들, 특히 빈곤국들의 이해를 일정수준 대변할 수 있어야 함.

- G20의 부상으로 신흥국의 영향력이 확대된 것은 사실이나 G20에 포함된 국가들은 신흥 경제강국들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여전히 빈곤국가들에 대한 발언권은 주어지지 못함.

- 이슈 선정 시 항상 G20 외부국가들의 관심사에 대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아프리카 10억 인구를 남아공이 혼자 대표하는 점을 감안하여 아프리카국가들의 협의체인 아프리카유니온의 의장국을 읍저버로 참석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정치적 배려도 필요할 것임.

■ G20 정상회의 시 G20 외에도 여러 국가 및 기구들의 대표가 참석하여 논의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하부구조의 도입이 필요함.

- 런던회의의 준비과정에서 도입되었던 실무그룹(working group)의 구성과 같은, 현안을 깊이있게 논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대하여 전문화 및 효율화를 꾀하는 것이 필요함.

- G20 정상회담의 회의 결과를 지속적으로 실행시키고 차기 회의를 준비하는 일들을 개최국이나 의장단에만 맡겨두기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소규모라 할지라도 사무국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2010년 정상회의에서 한국이 의장국 및 개최국으로서 회의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논의를 주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G20 정상회의 준비를 위한 체계적인 사전준비를 조속히 시행하는 것이 필요함.

- 빠른 시일 내에 관련조직을 정비하여 콘텐츠 개발 및 행사 준비와 관련한 업무분담 및 조정의 체계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회의의 이슈를 선정하고 주요 현안에 대하여 선도적인 대안들을 개발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국제사회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연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국제적으로도 지난 9월 초 G20 재무장관회의에서는 내년도 의장국 수임 및 정상회의 유치와 관련하여 영국, 호주 등과 인력교환을 추진하기로 하는 등 다각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으나 정부, 학계, 전문분야, 여타국가 등으로 협력의 기반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단기적으로는 여타 의장국들과 정상회의 개최에 대비한 협력을 강화해야 하며,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아시아 역내 협력의 강화 등으로 G20 내에서의 공조기반을 조속히 확보할 필요가 있음.
- 2010년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의장단에 속한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회의의 어젠다 선정과 논의구조 결정 등 주요사안에 대해 공조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함.
- G20 정상회의의 정례화로 국제사회에서 상시적 발언권을 확보한 한국은 지역적 협력을 강화하여 지속적인 정책공조가 가능한 발판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적어도 한·중·일 간 공조시스템을 제도화하여 정책공조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음. **KIEP**